

광주시 재정 증가율 1위 전남도 수익·건전성 향상

지방재정 평가

최근 들어 광주시 재정 여건은 점차 향상되고 있으나,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정부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건전성 및 수익·효율성 측면에서는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5면)

전남도의 경우는 수익성이나 재정의 건전성 등이 향상되고 있지만, 재정의 효율성은 타 광역자치단체보다 낮아 고비용 저효율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모두 재정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회계재정조사와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이 지난 2007~2008년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발표한 '지방재정평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의 순자산(총자산-총부채) 증가율은 10.50%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방재정의 실질적인 성장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로, 광역자치단체 평균(이하 평균) 3.29%를 3배 이상 앞질렀다. 전남도는 2.76%로 평균을 밑돌면서 8위를 기록했다.

■2008년 광주·전남 주요 재정지표 순위

구분	광주시		전남도	
	증가율·액수	순위	증가율·액수	순위
순자산 증가율	10.5%	1	2.76%	8
부채율	7.19%	8	3.76%	13
주민인당 총자산	10,513,300원	7	9,550,800원	8
주민인당 정부지원 수익	865,700원	7	2,285,900원	2
주민인당 총수익	1,660,500원	7	2,285,900원	2

(회계재정조사·프레시안 지방재정평가)

하지만, 전남도의 자체조달 수익 증가율은 평균(1.14%)을 훨씬 웃도는 13.83%로 16개 광역단체 중 2위를 차지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주민 1인당 총자산(유동자산+비유동자산)은 광주가 1천51만3천300원으로, 평균(936만8천100원)을 넘어 16개 시·도 중 5위를 차지했고, 전남은 955만800원으로 8위에 랭크됐다.

또 광주시의 주민 1인당 총부채(총부채/주민 수)는 70만5천300원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50만1천 원)을 초과한 5위, 전남은 광주의 절반 수준인 34만7천900원으로 11위를 분석했다.

수익지표 중 하나인 주민 1인당 총수익(자체조달수익+정부 간 이전수익+기타 수익)은 광주시가 전국 7위

로 중위권이었으나, 전국 평균인 180만2천7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166만500원에 불과했다. 주민 1인당 정부지원수익이 평균인 104만9천700원에 크게 못 미치는 86만5천700원으로 16개 시·도 중 9위를 차지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반면, 전남도의 주민 1인당 자체조달 수익은 31만9천400원에 불과, 15위로 최하위권이었던, 정부지원 수익은 196만4천100원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 주민 1인당 총수익은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전남은 또 효율성 지표에 있어 총수익 대비 인건비·운영비 비율과 교육기관 지원금·사회보장 지원금 비율이 전국 평균을 밑돌면서 재정 운용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최권일·윤현석기자 cki@



전남도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렉스톤호텔에서 2010 F1 코리아그랑프리 성공 개최를 위한 F1대회 조직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발족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중앙부처와 정·재·학계 등 115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준영 전남지사를 초대 조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전남도 제공)

전남 F1 조직위 공식출범

각계 인사 115명으로 구성...위원장에 박준영 지사

2010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가 15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관련기사 3면)

전남도와 F1코리아 그랑프리 운영법인인 카보(KAVO)는 이날 오후 서울 렉스톤호텔에서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선출했다. 조직위는 정계와 재계, 학계, 언론계 인사 등 11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부위원장에 김주훈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박인환 전남도의회 의장, 임병선 목포대 총장, 이계안 한겨레신문 경영자문위원 등 4명이 선임됐다.

또 집행위원은 강우석 전남도의원, 김일태 영암군수, 서정복 전남체육회 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위원회 사무국장, 정종득 목포시장, 하동만 전남발전연구원장, 이상면 전남도 정부부지사 등 11명이 맡게 됐다.

조직위원회에는 정두언·정양석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5명과 유선호·박지원 등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0명 등 정치계 인사 그리고 임태희 노동부 장관, 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강병부 행정안전부 2차관 등 정부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또 경제계 인사로는 박찬범 금호아시아나 회장, 정준양 포스코 회장, 전상호 GS칼텍스 사장, 송기주 LG전자 상무, 이종희 대한항공 사장, 윤영두 아시아나 항공 사장, 김삼산 금호고속 사장, 황무수 현대상호중공업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

조직위는 내년 10월 열리는 첫 F1대회 준비를 위한 민간 자원활동과 홍보, 관광객 유치, 대회 총괄, 기능 조정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F1조직위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10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F1대회 준비가 본격화하게 됐다"며 "한국 최초의 F1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눈

휴일까지 계속올듯
폭설·한파 대비를

휴일인 20일까지 눈이 내리고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폭설 및 한파에 대한 준비가 요구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6일 광주·전남은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흐리고 오후부터 눈이 내릴 것"이라고 15일 예보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2~5cm.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영상 4도로 전날보다 다소 낮겠다.

기상청은 이같이 춥고 눈이 내리는 날씨가 휴일인 20일까지 이어져, 곳에 따라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은 영하권을 뚫도는 이번 추위가 오는 18일에 절정에 다다른 뒤 다음주 초반부터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무안 한중산단 '미니산단' 전략 우려

SPC 자본금 72% 감자

무안 기업도시 한·중 국제산업단지(이하 한중 산단)의 부지면적이 예초 계획에 비해 30%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한중산단개발 특수목적법인(SPC)인 '한·중 국제산업단지개발(주)'은 15일 서울 메리엇 호텔에서 중국과 한국 측 지분투자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주주총회를 열고 SPC의 자본금

감자를 결정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현재 1천537억 원 규모인 SPC자본금을 430억 원 규모로 72%를 감자하는 방안이 양측 투자자들이 찬성했다.

SPC자본금이 줄어들게 되면 사업 부지면적도 현재 17.7km에서 기업도시 법에 따라 최소면적인 5.3km으로 크게 좁아져 한중산단은 예초 계획과는 달리 '미니기업도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대 한국 지분을 구조는 현행대로 중국 투자자가 51%를, 한국투자자가 49%를 유지하기로 해 기대를 모았던 중국 측 투자확대도 이

끌어내지 못했다.

감자결정으로 양국기업이 무안을 과 청계·현경면 일대에 1조7천억원을 들여 2012년까지 산업·유통 대학단지 및 차이나타운 등을 조성하려던 계획도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1조7천억 원 규모의 산단조성 사업비는 5천억 원 수준으로 감소해 한국 측 부담은 줄어들지만 국내투자자들이 맡아야 할 2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도 해결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현행대로

국회 정개특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5일 2010년 지방선거와 관련,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개특위는 또한, 금품을 수수한 유권자에 50배의 과태료를 물리는 조항을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고쳐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상한도 현행 5천만원에서 3천

만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예비후보자 선거 운동 확대를 위해 예비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예비후보자 본인도 동행하는 선거사무장, 사무원의 명함 배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선거운동원에 대한 최소한의 교통편의, 다과류 제공은 허용하는 등 등 과도한 선거운동 규제는 푸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만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예비후보자 선거 운동 확대를 위해 예비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예비후보자 본인도 동행하는 선거사무장, 사무원의 명함 배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